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광복70년, '삶의 질' 변화와 시사점
- 특히 '가족/공동체' 가 문제

발행인 : 하 태 형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 원,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02-2072-622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광복70년, '삶의 질' 변화와 시사점
- 특히 '가족/공동체'가 문제

< Executive Summary >

1. 개요 : 경제와 '삶의 질'	1
2. 광복 70년, '삶의 질' 변화와 특징	3
3. 시사점	12
【HRI 경제 통계】	13

< 광복70년, '삶의 질' 변화와 시사점 >

■개요: 소득 증가와 '삶의 질'

우리나라 GDP는 1953년 13억달러에서 2013년 1조3천억달러로 1000배 증가하고, 1인당 GDP는 1953년 66달러 2013년 2만6천달러로 400배가량 증가하는 등 경제규모와 소득은 급증했는데, 과연 '삶의 질'도 비례하여 향상되었는지 알아보았다. 현대경제연구원(2012)의 기존 연구를 토대로 '경제적 안정', '사회적 유대', '보건·복지', '생활기반'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12개 구성 항목, 24개 세부 지표 등 측정 가능한 지표에 초점을 두고 그 변화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광복70년, '삶의 질'의 4가지 분야별 변화와 특징

①**경제적 안정**: 경제적 안정을 구성하는 3가지 항목(고용, 분배, 교육) 가운데 교육 관련 지표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고용과 분배 관련 지표는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과 고용률 등 고용관련 지표는 1960년대 수준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는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비중과 소득5분위배율 등 분배관련 지표들은 1990년대 이래 악화 추세에 있으나 최근 소폭 개선되었다. 이처럼 고용과 분배 관련 지표들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반면, 유치원 취원율, 대학진학률 등 교육 관련 지표들은 꾸준히 향상되었다.

②**사회적 유대**: 사회적 유대를 구성하는 4가지 항목(공동체, 안전, 문화, 정보) 가운데 '정보'와 '문화'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안전'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크며, '공동체'는 심각한 정도로 좋지 않은 수준이다. 즉, 이혼율, 자살률 등 '가족/공동체' 관련 지표는 OECD 최고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편이며, 교통사고사망자 등 '안전'과 관련된 지표도 최근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반면, 해외출국자 수 등 '문화' 관련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유무선전화 가입자 수 등 '정보화' 관련 지표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향상되었다.

③**보건-복지**: 보건복지를 구성하는 2가지 항목(건강, 사회보장) 가운데 '건강'과 관련된 지표들은 크게 향상되었으며, '사회보장'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복지분야는 여전히 선진국과의 격차가 큰 편이다. 예를 들면, 영아사망률, 의료인력 숫자, 건강보험 적용률,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등 보건복지 관련 지표들은 지난 70년간 크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복지지출의 GDP비중'(한국은행 국민계정 2010년 SNA 기준)을 보면 1970년 2.8%에서 2012년 10.3%로 크게 높아졌으나, 2014년 현재 선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달하고 있다.

④**생활기반**: 생활기반을 구성하는 3가지 항목(주택, 생활환경(상하수도, 전기), 교통) 모두 과거에 비해 큰 폭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주택보급률, 상수도보급률, 1인당 전기소비량,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포장률 등 대부분의 지표들은 지난 70년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1인당 주거면적 등 '주거의 질'과 관련 지표에 있어서는 선진국 대

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 시사점

광복 70년 동안 ‘삶의 질’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70년에는 ‘삶의 질’도 선진국 수준에 맞게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가장 시급하다. 아파트단지나 마을단위의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하며, 대가족 가구에 대한 지원과 독거노인에 사회적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하다. 아울러 맞벌이 가구의 가사분담, 정시퇴근, 근로시간의 단축 등 ‘가족의 가치’(Family Value)를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안전의식의 개선, 복지서비스의 양적·질적 제고, 주거의 질 향상, 좋은 일자리 창출, 소득격차 완화 등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져야 한다.

< 광복70년, ‘삶의 질’ 관련 주요 지표의 변화 추이 >

분야	항목	세부 지표	변화 추이
경제적 안정	고용	실업률	8.1%('63) → 2.0%('96) → 3.5%('14)
		고용률	51.4%('64) → 60.9%('97) → 60.2%('14)
	분배	중산층비중	76.3%('92) → 66.3%('08) → 69.7%('12)
		소득5분위배율	3.52배('92) → 4.97배('10) → 4.56배('12)
	교육	초등 학급당 학생수	62.1명('70) → 23.2명('13)
		유치원 취원율	1%('65) → 47%('14)
대학진학률		27.2%('80) → 70.7%('13)	
사회적 유대	공동체	1천명당 이혼 (조이혼율)	0.4('70) → 3.4('03) → 2.3('13)
		10만명당 자살 (자살률)	8.7('83) → 28.5('13)
	안전	10만명당 교통사고사망자	8.9('73) → 31.0('91) → 10.1명('13)
	문화	내국인 해외출국자	7.9천명('60) → 13,834.5천명('13)
	정보	유선전화 가입자	97천명('61) → 17,620천명('13)
		무선전화 가입자	80천명('90) → 54,681천명('13)
보건 복지	건강	영아사망률 (천명당)	138(1950~55평균) → 2.9('12)
		인구10만명당 의사	22.3명('50) → 218.2명('13)
	사회 보장	건강보험 적용률	8.8%('77) → 99.5%('13)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26.3%('88) → 82.8%('13)
		복지지출의 GDP비중 (한국은행 2010 SNA 기준)	2.8%('70) → 10.3%('12)
생활 기반	주택	주택보급률 (구 기준)	78.0%('65) → 116.7%('13)
		1인당 주거면적	7.9㎡('75) → 31.7㎡('12)
	생활 환경	상수도 보급률	18.0%('47) → 97.9%('11)
		1인당 전력소비량	46KWh('61) → 9,142KWh('11)
	교통	자동차등록대수	6천대('39) → 18,870천대('12)
		도로포장률	2.5%('40) → 83.4%(2012)

주 : 지표별 단위 등 세부 내역은 본문 참조.

1. 개요 : 경제와 '삶의 질'

○ 한국의 경제규모는 1953년 13억 달러에서 2013년 1조 3천억 달러로, 1인당 GDP는 1953년 66달러에서 2015년 3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지만, 과연 '삶의 질'은 지난 70년 동안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함

- 1인당 GDP는 1953년 66달러에서 1994년 1만 달러, 2006년 2만 달러, 2015년 3만 달러로 계속해서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삶의 질'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다양하게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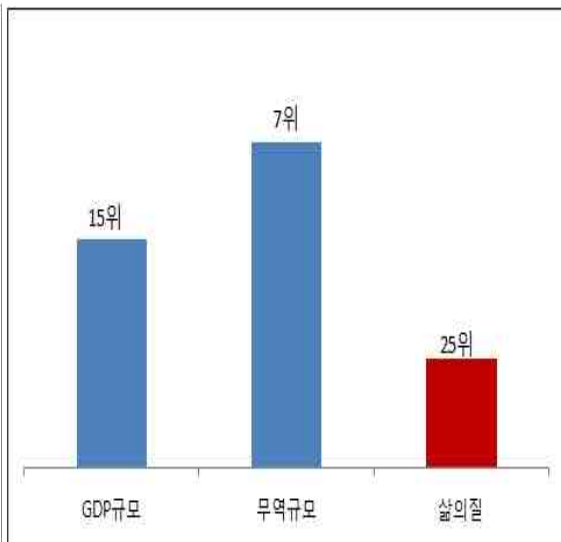
-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광복이후 70년 동안 국가 전체의 GDP, 1인당 GDP, 무역규모 등은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2014년 OECD BLI(Better Life Index)로 살펴본 '삶의 질' 순위는 36개국 중 25위에 불과함
- 따라서, 광복 이후 70년에 걸친 경제·사회적 발전과 변화에 따라 '삶의 질'의 구성 요소별로 그 수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 1인당GDP 증가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국민계정(SNA) 2010년 기준 .

< GDP, 무역, 삶의 질 국가순위 >



자료 : 통계청, OECD, 현대경제연구원.
주 : '삶의 질'은 OECD BLI지수(2014년) 기준.

○ '삶의 질'이란 삶을 가치 있고 윤택 있게 만들어 주는 총량으로서의 만족감¹⁾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관적 측면도 많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소득, 건강, 교육, 환경, 안전 등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측정²⁾함

1) 김상균(1996).

- 광복 이후 70년간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현대경제연구원의 '삶의 질' 연구(2012)³⁾에 기초하여, 경제적 안정, 사회적 유대, 보건·복지, 생활기반 등 4가지 분야, 12개 구성 항목, 24개 세부 지표를 토대로 분석
 - 경제적 안정: 고용(실업률, 고용률), 분배(중산층비중, 5분위배율), 교육(유치원 취원율, 학급당 학생수, 대학진학률) 관련 세부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
 - 사회적 유대: 공동체(이혼율, 자살률), 안전(교통사고), 문화(해외여행자), 정보(유무선 전화가입자) 관련 세부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
 - 보건·복지: 건강(영아사망률, 의료인력)과 사회보장(GDP대비 복지지출비중, 국민연금 가입률, 건강보험 적용률)관련 세부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
 - 생활기반: 주택(주택보급률, 1인당 주거면적), 생활환경(상수도보급률, 전력소비량), 교통(자동차등록대수, 도로포장률) 관련 세부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

< '삶의 질' 을 구성하는 분야, 항목, 세부 지표 >

분야	구성 항목	세부 지표	시작 연도	출처
경제적 안정	고용	실업률, 고용률	1963	통계청
	분배	중산층비중, 소득5분위배율	1990	통계청
	교육	학급당 학생수(초등학교)	1970	교육개발원
		유치원 취원율 / 대학진학률	1965 / 1980	교육개발원
사회적 유대	공동체	이혼율 / 자살률	1970 / 1983	통계청
	안전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1973	경찰청
	문화	내국인 해외출국자 수	1960	법무부
	정보	유/무선 전화가입자 수	1940/1988	방송통신위원회
보건 복지	건강	영아사망률	1950	UN, 통계청
		인구 10만명당 의료인 수	1950	보건·복지부
	사회 보장	건강보험 적용률 /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1977 / 1988	국민연금공단
생활기반	주택	주택보급률	1965	국토해양부
		1인당 주거면적	1975	통계청
	생활환경	상수도 보급률/ 전력소비량	1947 / 1961	환경부
	교통	자동차등록대수	1939	국토해양부
		도로포장률	1936	국토해양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현대경제연구원(2012)의 '삶의질 지수(HQLI) 연구를 참고하여 일부 수정함.

2) 장영식 외(2007).

3) 현대경제연구원, "소득과 삶의 질 격차 확대되고 있다", 경제주평 12-05(통권 476호), 2012.2.3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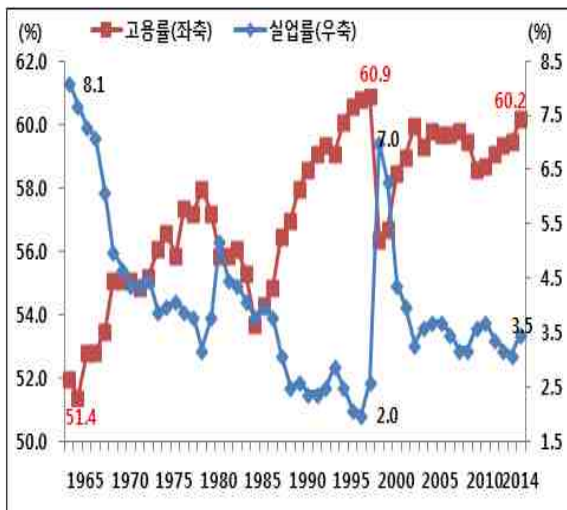
2. 광복 70년, '삶의 질'의 변화와 특징

1) 경제적 안정 : '고용, 분배' 1990년대 이후 불안정, '교육' 크게 개선

○ 실업률 등 고용관련 지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5분위배율 등 소득분배 지표도 1992년 이래 악화 추세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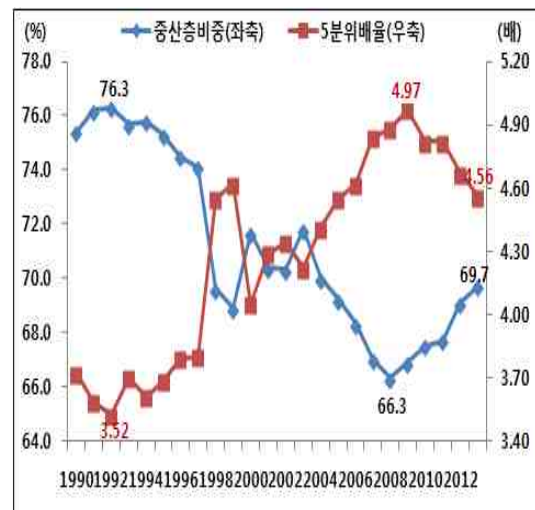
- 고용률은 1964년 51.4%에서 2014년 60.2%로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의 최고치(60.9%) 수준에 도달함
 - 고용률은 1964년 51.4%를 저점으로 1997년 60.9%까지 올라간 바 있으나, 1998년 외환위기 당시 56.4%로 급락했다가 2014년 현재 60.2%까지 상승함
 - 취업자는 1963년 756만3천명에서 2014년 2,559만 9천명으로 3.4배 증가
-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중산층비중, 5분위 배율 등 소득분배 지표는 1992년 이래로 계속 악화되다가 최근 소폭 개선됨
 - 실업률은 1963년 8.1%에서 1996년 2.0%로 크게 하락했으나,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7.0%까지 급등했다가 2014년 현재 3.5%로 하락했음
 - 소득1분위 대비 소득5분위의 배율은 1992년 3.52배로 가장 낮았지만 계속 증가하여 2010년 4.97배를 기록한 후 감소하여 2013년 현재 4.56을 기록함
 - 중산층 비중도 1992년 76.3%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하여 2008년 66.3%로 내려간 후 소폭 반등하여 2013년 현재 69.7%를 기록함

< 고용률 및 실업률의 추이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1999년까지 구직기간 1주, 2000년부터 4주 기준.

< 중산층 비중 및 5분위 배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도시 2인 이상 가구, 처분가능소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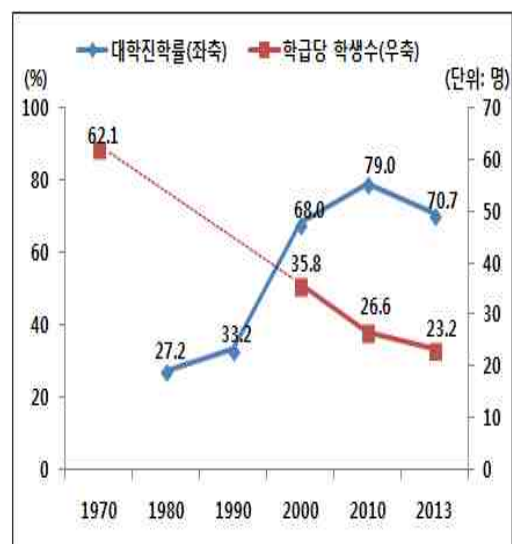
○ 유치원 취원율, 학급당 학생수, 대학진학률 등 교육과 관련된 지표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4)함

-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수와 취원율은 1965년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1965년에 유치원 수 423개, 4~5세 아동 196만 명 중 2만 명만 유치원에 다녔으나(취원율 1%), 2014년 현재 유치원 수는 8,826개로 20배 이상 급증했으며,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65만 2천여 명으로 취원율도 47%에 달함
- 교육의 질적인 지표인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크게 개선됨
 -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65년 62.4명에서 1985년 38.3명, 2013년 23.2명으로 크게 줄었고, 학급당 학생 수 역시 1970년 평균 62.1명으로 소위 '콩나물 교실'이었으나 2000년 35.8명, 2013년 23.2명으로 크게 개선되었음
- 고등교육에의 접근성을 보여주는 '대학진학률'은 2008년 83.8%까지 올라갔으나, 교육거품 논란과 대졸 취업난을 반영하여 2013년 현재 70.7%까지 낮아짐
 - 1970-80년대의 대학은 '우골탑'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소를 팔아야 겨우 갈 수 있는 곳이었으며, 대학 진학률도 1980년 27.2%에 불과했으나, 2008년 83.8%까지 상승했으며, 2009년부터 하락하여 2013년 현재 70.7%로 낮아짐

< 유치원 원아 수 및 취원율 추이 >



< 대학진학률 및 학급당 학생수 추이 >



자료 : 통계청, 교육개발원, 현대경제연구원.

주 : 최근 유치원비 지원에 따라 원아수, 취원율 급증 / 학급당 학생 수 =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4)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 결과(2015)에 따르면, 사교육비 지출의 부담이 가계소비를 짓누르며, 경제적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40대와 50대가 심각함.

2) 사회적 유대 : '공동체'는 매우 미흡, '정보·문화'는 크게 향상

○ 사회적 유대는 가족으로 대표되는 '공동체'의 붕괴가 상당히 심각⁵⁾한 수준이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로 살펴본 '안전' 수준도 개선의 여지가 많음

-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 핵가족화 등에 따라 가족/친척/공동체 내부의 유대감이 떨어지면서 자살률과 이혼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짐
- 자살률(10만명당 자살건수)은 1983년 8.7에서 2000년 13.6, 2011년 31.7까지 높아졌다가 2013년 28.5로 감소했지만, OECD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조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도 1970년 기준 0.4에서 2003년 3.4까지 증가했다가 2013년 2.3으로 낮아짐. 외환위기,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때 이혼율이 증가했으며, OECD 선진국 중 높은 편에 속함
- 교통사고 사망자 수(인구 10만명당)는 1973년 8.9에서 1991년 31.0으로 크게 증가한 후 감소하여 2013년 현재 10.1로 낮아졌지만 선진국 대비 높은 편임
- 교통법규 및 단속 강화, 운전문화의 성숙 등에 따라 1991년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지만, **2011년 OECD 회원국 중 2위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편임**

< 자살률 및 이혼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자살률 = 10만명당 자살 건수.
 조이혼율 = 1천명당 이혼 건수.

< 교통사고 사망자 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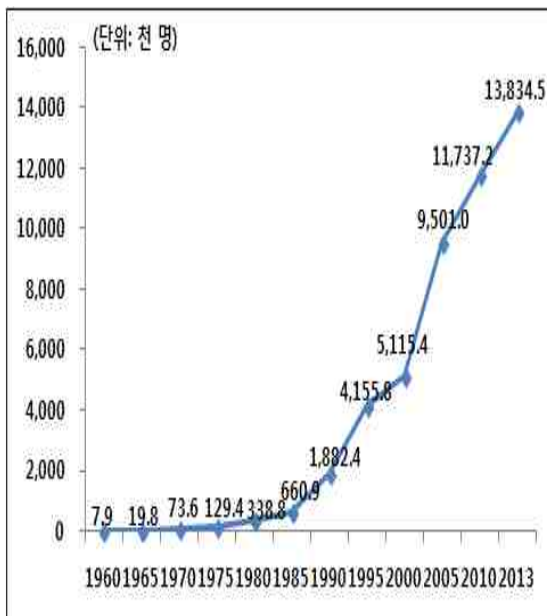
자료 : 경찰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인구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5) 우리나라의 2014년 OECD BLI(Better Life Index, '삶의 질' 지수) 순위는 36개국 중 25위로 낮은데, 11개 세부 항목 중 '공동체'는 34위에 불과하여 특히 낮으며, 11개 세부 항목 중 가장 저조한 편에 속함

○ 문화 및 정보 관련 지표인 '해외출국자 수'와 '유무선 전화가입자 수'는 1990년대 이후 급증하여 삶의 질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1년 동안 해외로 출국한 적이 있는 내국인의 수는 1960년 1만 명에도 못 미쳤지만 2013년 현재 1,383만 명으로 급증함
 - 1960년 7천9백 명 정도에 불과했던 해외출국자 수는 1990년대에 접어들어 해외여행 자유화, 무역 및 경제 규모의 급증, 소득 수준의 향상 등에 힘입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2013년 한해에 1,383만4천5백 명을 기록함
- 급속한 정보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은 우리나라는 인터넷과 이동전화 등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에 있어서 2013년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섬
 - 1940년 5만 9천명, 1961년 9만7천명에 불과했던 유선전화는 소위 '상류층'과 '부'의 상징이었으나, 2007년에는 2,313만 명까지 증가해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여 2013년 말 현재 1,762만 명으로 감소함
 - 1984년에 시작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는 1988년 2만여명, 1990년 8만여명에 불과했으나, 1999년 9월 유선전화를 추월했고, 2013년 현재 5,468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으며, 유선전화(1,762만 명)의 3.1배에 해당함

< 해외 출국자 수 추이 >



자료 : 법무부, 현대경제연구원
 주 : 공무, 상용, 유학, 관광 등 모든 출국 사유 포함

< 유무선 전화 가입자 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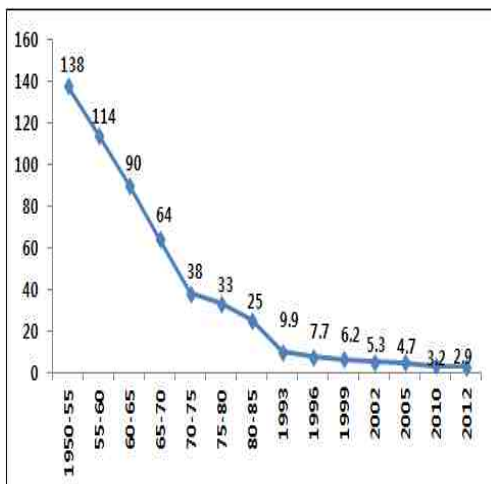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현대경제연구원
 주 : 이동전화서비스는 1984년 3월에 처음 시작됨

3) 보건·복지 요인 : 보건·복지 크게 향상, 그러나 복지는 여전히 미흡

○ 병원과 의료 인력의 증가 등 보건의료 관련 인프라가 꾸준히 확충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 및 관련 양적·질적 지표가 크게 향상되었음

- 영아사망률은 1950년대 138에서 2012년 2.9로 크게 개선되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임
- 영아사망률((당해년도 0세 사망아수/당해년도 연간출생아수)*1,000)은 1950년대 초반 138에서 1960년대 초반 90, 1993년 9.9, 2012년 2.9로 크게 개선
- 영아사망률은 1990년대 중반이후 OECD평균에 비해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여건과 수준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보여줌
- 건강의 대표적인 지표인 기대수명도 1970년 61.8세에서 2010년 80.8세로 40년 만에 20세가량 늘어났음
- 전체 의료인력의 숫자는 1950년에 비하면 50배 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인구10만명당 의사의 숫자도 10배가량 증가하여, 의료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함
- 우리나라 의사는 1950년 5천명 미만이었으나 2013년 11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인구 10만명당 의사도 같은 기간 22.3에서 218.2로 10배가량 증가
- 약사는 같은 기간 1,046명에서 6만 3,292명으로 60배 증가했고, 인구 10만명당 약사의 숫자도 각각 5.1명에서 126.0명으로 25배 증가

< 영아사망률 추이 >



< 인구10만명당 의료인력 증가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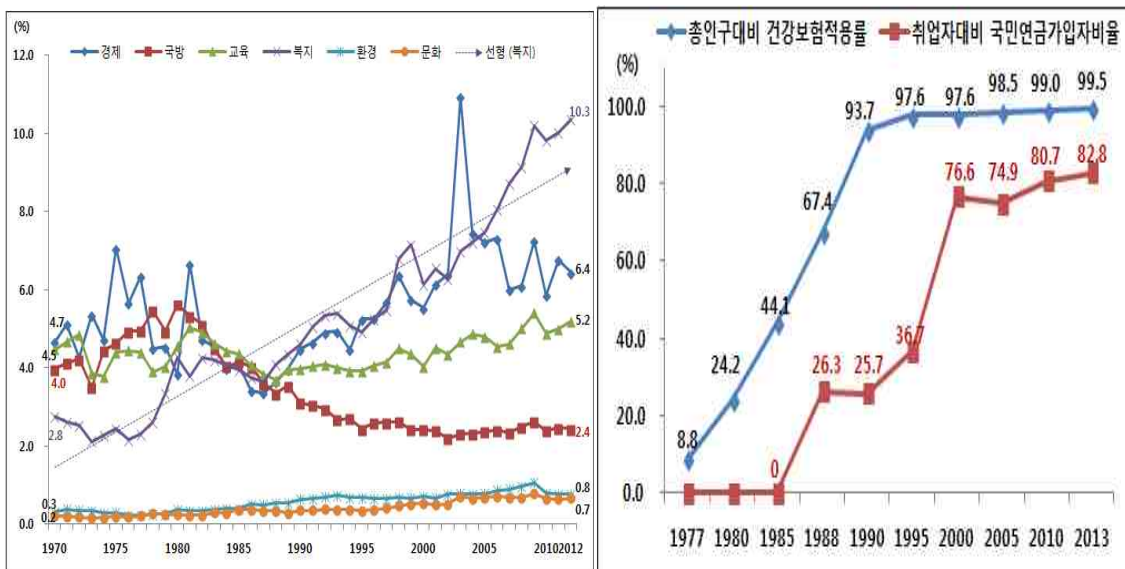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3
의사	22.3	31.1	47.5	60.3	98.1	157.7	205.3	218.2
치과 의사	3.7	5.5	6.8	9.7	22.2	39.2	51.4	54.6
한의원사	8.0	11.7	10.3	8.1	13.3	26.3	38.7	42.5
약사	5.1	18.8	46.6	65.1	85.5	110.1	123.4	126.0
간호사	7.7	19.4	46.1	107.9	205.2	348.6	547.0	612.9

자료 : UN, 보건복지부,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영아사망률=(당해년도 0세 사망아수/당해년도 연간출생아수)*1,000.

- 복지와 사회보장 관련 인프라도 꾸준히 확충되었고 서비스도 개선되었으나, 복지수준과 복지지출의 GDP비중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침
- 복지지출은 특히 1998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현재 정부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선진국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국민계정상 일반정부 분야별 총지출(SNA 2010 기준)의 명목GDP대비 비중을 보면, 복지지출은 1970년 2.8%에서 2012년 10.3%까지 가장 크게 증가
 - OECD기준 '공공 복지지출'의 GDP비중은 2014년 10.4%로서 OECD 평균 21.6%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사회보장 관련하여 건강보험적용률은 1977년 8.8%에서 2013년 99.5%로 거의 전국민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의 취업자대비 비중을 보면 1988년 26.3%에서 2013년 82.8%로 크게 증가함
 - 총인구 대비 건강보험 적용자 비율: 1977년 8.8% → 2013년 99.5%
 -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된 국민연금은, 1999년 도시지역 가입자, 2003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전국민 연금시대를 열었음(※취업자대비 국민연금 가입자 : 1988년 26.3% → 2013년 82.8%)

< 일반정부 기능별 지출의 GDP비중 추이 > < 건강보험 적용률과 국민연금 가입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HPI.

주 : 복지·보건·사회보안주택·지역개발 SNA 2010, 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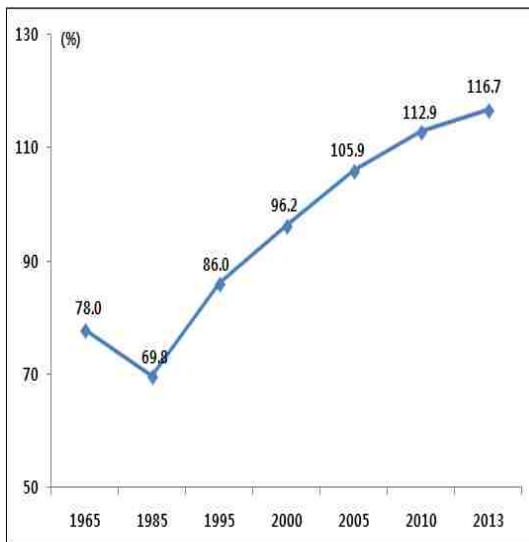
주 : 국민연금은 1988년에 처음 가입이 시작됨.

4) 생활기반 요인 : 주거, 환경, 교통 등 생활기반은 비교적 양호한 편

○ 주택보급률, 총주택수, 1인당 주거면적 등 주거 관련 양적, 질적 지표들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나, 향후 좀 더 개선의 여지는 있음

- 2013년 현재 (구 기준) 주택보급률은 116.7%(신 기준, 103.0%)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총 주택수(주택재고)도 1950년의 4.2배로 크게 증가함
 - 1950년에 328만여 호 수준이던 총 주택수(주택재고)는 2010년 1천 388만호 (빈집 제외)로 4.2배 증가함
 - 주택보급률(구 기준)도 1965년 78%수준에서 1985년 69.8%까지 하락했으나, 2005년 105.9%, 2013년 현재 116.7%에 달함 (※신 기준, 2013년 103.0%)
 - 인구1천명당 주택도 1980년 142.2호에서 2010년에는 363.8호로 2배이상 증가
- 질적인 지표 중 하나인 1인당 주거면적도 1975년에 비하면 4배 이상 증가했으나,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음
 - 1인당 주거면적을 보면, 1975년 7.9m²에서 1990년 14.0m², 2005년 26.2m², 2010년 28.5m², 2012년 31.7m²로 4배 이상 증가했지만, 미국(2005년) 68.2m², 일본(2003년) 38m² 등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은 좁은 편에 속함

< 주택보급률 증가 추이 >



< 1인당 주거면적 증가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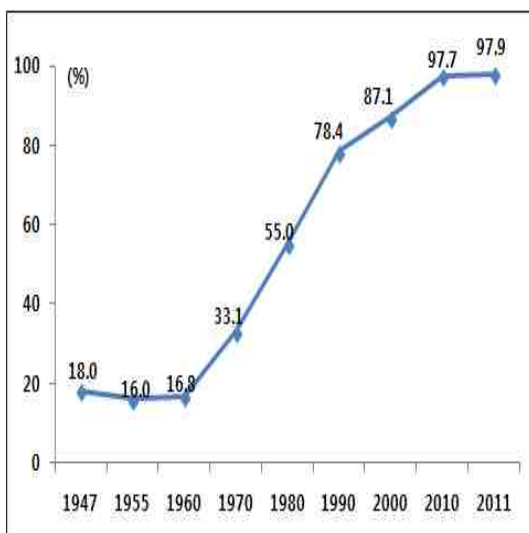
주 : 생활기반의 구성요소 추이는 원지수임.

6) 1인당 주거면적 등 질적인 지표와 주거복지 관련 지표는 좀더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 최근 전세 가격 급등과 전세난 등도 반영되지 못함.

○ 수도, 전기 등 주거 환경은 물론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 연장과 포장률 등 교통 환경도 크게 개선되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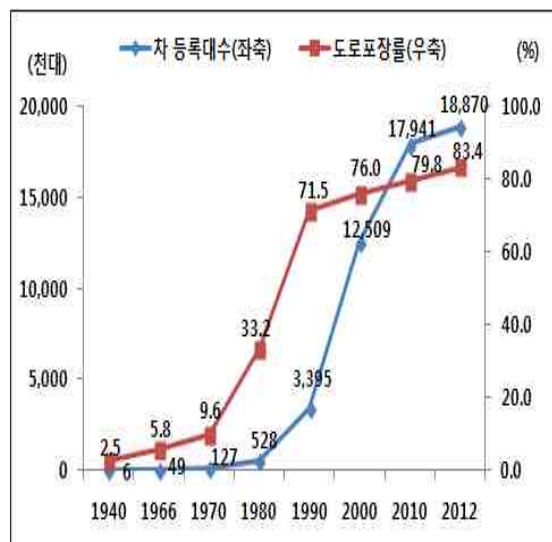
- 상수도 보급률은 1947년 18%에 불과했으나 2011년 98%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1인당 하루 전기소비량도 1961년 46KWh에서 2011년 9,142KWh로 급증
 - 하루 1인당 급수량도 1947년 66ℓ에서 2011년 335ℓ로 5배 이상 증가함
 - 하루 1인당 전력소비량(KWh/인): 46(1961년)→ 5,555(2001년)→ 9,142(2011년)
- 자동차 등록대수도 2012년 현재 1,887만대로서 2천만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자동차 대중화(1가구 1자동차) 시대를 열었음
 - 자동차 등록대수는 1911년에 고종황제의 어차 2대, 1939년에 6,296대에 불과했으나, 1997년 1천만대, 2012년 현재 1,887만대로서 2천만대에 육박하고 있음
 -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완만하게 증가했으나, 1970년에 12만 6,506대로 급증했고, 1997년에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1천만대(1,041만대) 시대를 열었고, 2012년 현재 1,887만대에 달하고 있음
-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하면서 도로 길이와 포장률도 크게 증가함
 - 도로 길이는 1944년 2,555만km에서 2013년 1억 641만km로 4배이상 늘어났으며, 도로 포장률도 1940년 2.5%, '44년 4.2%에서 2012년 83.4%로 크게 증가

< 상수도 보급률 추이 >



자료: 환경부, 현대경제연구원.

< 자동차 등록대수 >



자료: 국토교통부, 현대경제연구원.

주: 車등록대수는 1940년 대신 1939년 데이터임.

5) 광복70년, '삶의 질' 종합 평가

- 광복이후 70년동안 우 '삶의 질' 관련 큰 폭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특히 가족,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유대' 분야에서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됨
- '사회적 유대'가 가장 미흡하며, '경제적 안정'과 '보건 복지'는 다소 미흡하며, '생활기반'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주거의 질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함
 - '사회적 유대'와 관련해서는 이혼율, 자살률 등 '가족/공동체' 관련 지표가 특히 부진하며, 교통사고 등 안전과 관련된 지표도 많은 개선이 요구됨
 - '경제적 안정'과 관련해서는 고용 관련 양적·질적 지표들의 개선이 필요하며, 중산층비중과 5분위배율 등 소득분배 관련 지표들에도 유의해야 함
 - '보건복지'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사회보장 관련 많은 지표들이 70년간 크게 개선되었지만, 복지지출의 GDP비중은 선진국 평균에 여전히 크게 미달함
 - '생활기반'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지난 70년간 크게 개선되었지만, 1인당 주거면적 등 주거의 질 관련 지표들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음

< 광복 70년, '삶의 질' 관련 주요 지표의 변화 추이 >

분야	항목	세부 지표	변화 추이
경제적 안정	고용	실업률	8.1%('63)→ 2.0%('96)→ 3.5%('14)
		고용률	51.4%('64)→ 60.9%('97)→ 60.2%('14)
	분배	중산층비중	76.3%('92)→ 66.3%('08)→ 69.7%('12)
		소득5분위배율	3.52배('92)→ 4.97배('10)→ 4.56배('12)
	교육	초등 학급당 학생수	62.1명('70)→ 23.2명('13)
		유치원 취원율	1%('65)→ 47%('14)
대학진학률		27.2%('80)→ 70.7%('13)	
사회적 유대	공동체	1천명당 이혼 (조이혼율)	0.4('70)→ 3.4('03)→ 2.3('13)
		10만명당 자살 (자살률)	8.7('83)→ 28.5('13)
	안전	10만명당 교통사고사망자	8.9('73)→ 31.0('91)→ 10.1명('13)
	문화	내국인 해외출국자	7.9천명('60)→ 13,834.5천명('13)
정보		유선전화 가입자	97천명('61)→ 17,620천명('13)
	무선전화 가입자	80천명('90)→ 54,681천명('13)	
보건 복지	건강	영아사망률 (천명당)	138(1950~55평균)→ 2.9('12)
		인구10만명당 의사	22.3명('50)→ 218.2명('13)
	사회 보장	건강보험 적용률	8.8%('77)→ 99.5%('13)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26.3%('88)→ 82.8%('13)
생활 기반	주택	주택보급률 (구 기준)	78.0%('65)→ 116.7%('13)
		1인당 주거면적	7.9㎡('75)→ 31.7㎡('12)
	생활 환경	상수도 보급률	18.0%('47)→ 97.9%('11)
		1인당 전력소비량	46KWh('61)→ 9,142KWh('11)
	교통	자동차등록대수	6천대('39)→ 18,870천대('12)
		도로포장률	2.5%('40)→ 83.4%(2012)

3. 시사점

- '사회적 유대' 분야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가족/공동체'이며, 특히 이혼, 자살 등 세부 지표와 관련된 대책이 필요함
 -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혼율은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함
 - 남성의 가사분담 확대,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보육시설 확충, 양육비용 지원 등 이혼율을 낮추기 위한 사회 전체적 노력이 필요함
 -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인구가 많은 시골지역의 자살률이 특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대가족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대가족에 편리한 신개념 아파트의 보급을 늘리는 등 가족 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며, 가족의 가치(family value)를 재조명하는 노력도 필요함

- '경제적 안정' 분야의 경우 '좋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개선'을 통해 고용과 소득의 안정감을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공식 실업률은 3%대로서 높지 않지만 고용의 질적 측면과 고용률, 체감실업률 등에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며, 소득분배 개선 대책도 지속되어야 함
 - 청년, 여성,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법률,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늘려가야 함
 - 사회안전망 보완,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확립, 지역별 거점대학 육성, 지역특화 발전 등의 대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소득격차를 완화해 나가야 함

-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많이 개선되었지만 복지 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 확충 등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여전히 복지에 대한 수요는 강하고 지출도 당분간 크게 증가할 전망이므로 복지 관련 지출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복지 제도의 신설이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복지 제도의 설계가 필요함

- 연령별로 복지에 대한 수요도 차별화되므로, 20대 젊은 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30대를 위한 주택 및 보육관련 지원 확대, 40대를 위한 대학등록금 부담의 완화, 50대 이상을 위한 노후소득 지원 정책이 필요

○ '생활기반' 분야의 경우 대체적으로 양호하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이제는 질적인 측면을 제고해야 할 단계에 도달했으므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도심녹지의 확대' 등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필요함

- 주거의 양적인 측면은 많이 확충되었으나, 1인당 주거면적, 층간 소음, 프라이버시의 확보 등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보완이 필요함
- 각 지자체별로 1인당 '도심녹지'를 확충하기 위한 재원조달 등 생활환경의 질적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경제연구본부 김동열 정책연구실장 (031-288-7950, dykim@hri.co.kr)

HRI 경제 통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3	3.0	3.7	3.6	3.6	3.5	3.6	3.6
	민간소비 (%)	1.9	2.0	2.0	2.6	2.3	3.0	2.6	2.8
	건설투자 (%)	-3.9	6.7	1.9	1.8	1.9	1.8	4.3	3.0
	설비투자 (%)	0.1	-1.5	7.5	3.9	5.7	4.2	6.0	5.1
	지재투자 (%)	8.6	7.3	6.5	5.9	6.2	7.3	7.0	7.1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508	799	392	408	800	320	360	680
	무역수지 (억 달러)	283	440	202	231	433	192	234	426
	수출 (억 달러)	5,479	5,596	2,833	2,936	5,770	2,949	3,074	6,023
	(증가율, %)	(-1.3)	(2.1)	(2.5)	(3.7)	(3.1)	(4.1)	(4.7)	(4.4)
	수입 (억 달러)	5,196	5,156	2,631	2,705	5,336	2,757	2,840	5,597
	(증가율, %)	(-0.9)	(-0.8)	(2.6)	(4.4)	(3.5)	(4.8)	(5.0)	(4.9)
소비자물가 (평균, %)	2.2	1.3	1.4	1.9	1.7	2.0	1.9	1.9	
15~64세 고용률 (%)	64.2	64.4	65.0	65.6	65.3	66.0	66.5	66.2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